



[에듀·잡] 경제상황 악화에 대기업 10곳 중 4곳 채용계획 미정 L4



Life

[엔터테인먼트] '마더' 이보영 "엄마가 되는 것도 깨달아가는 것" L6



대학들 전형료 장사 그만!... 산정기준 깎깐해진다

수당·경비 구분해 기준 잡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될 것

올해 대입부터 대학들이 지원자들로부터 받는 대입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더 깎깐해진다. 대입전형료는 그동안 산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로 책정해 방만하게 지출돼 수험생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출 항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입학전형료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구분해 구체화 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수당으로 산정해 받은 금액 내에서 실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

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 등 6가지로 표준화해 해당 사항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으로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다. 특히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때만 지출할 수 있고, 홍보비도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추가로 5% 축소했다.

이에 따라 홍보 경비의 경우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의 경우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학정원 1300~2500명 사이는 25%, 1300명 이하의 경우는 35%까지 홍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료 산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했고, 산출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이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대학 업무담당자에게 적극 알리고, 2019학년

대입전형료 지출의 항목과 산정방법의 변화

| | 현행 | 개정 |
|-----------|---|---------------------------------------|
| 수당 | 학교별 각종 수당 규정 및 지급 | 6개 수당으로 표준화 출제·감독·평가·준비 및 진행·홍보·회의 |
| 회의비 | 입학전형 관련 모든 회의 |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 |
| 홍보비 | 총 지출액 대비 | |
| | 입학정원(명) | 상한비율 |
| | 1300 미만 | 40% |
| 1300~2500 | 30% | |
| 2500 이상 | 20% | |
| 산정방법 | 실제 비용 단순 지출 | |
| | 비용 지급 시 인원, 수량, 면적, 횟수, 시간 등 증빙서류 강화 | |
| | 자산의 취득 및 운용성격의 지출 금지 | |

자료/교육부

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적

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해결 위한 '핫라인' 가동

고정연락관 지정해 정보 공유하기로 박원순 "실질적인 협력방안 이끌 것"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가동한다.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책을 집중 연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지닝 베이징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된 협력기구로, 경제·문화·교육·환경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2년에 한 번씩 두 도시에서 회의를 연다. 천지닝 시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베이징시 간부급 3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찾았다.

서울과 베이징은 이번 3차 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천지닝(陳吉寧) 중국 베이징시장이 19일 서울시장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락관을 지정해두는 방식의 '미세먼지 핫라인'을 만들어 두 도시의 대기 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 메커니즘 구축

을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도 개최한다. 과학연구와 기술 시범사업 협력을 도모하는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도 교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두시는 오는 20일 서울시장에서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실질적인 공동 대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베이징의 공동 관심사이자 최우선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를 '호흡공동체'인 동아시아 공동체3의 과제로 보고, 중국 산둥성,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톈진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도시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50+취업진로전문관' 모집... 경험 활용해 청소년 돕는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도와 50+세대 사회참여·청년 취업 이끌 것

서울시는 시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진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 줄 '50+취업진로전문관'으로 활동할 50+세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50+취업진로전문관은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면접지도 등 실질적인 취업 지도를 지원한다.

전문관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비롯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기술교육



2017년 50+ 취업진로전문관 활동 모습. /서울시

등 취업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취업정보리서치, 사회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취업처 발굴 등의 활동도 펼친다.

50+취업진로전문관 지원대상은 만50세부터 67세까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다.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접수기간은 19~30일까지다. 서울시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50+취업진로전문관 사업은 50+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들의 취업을 모두 이끌 수 있는 세대통합형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이라며 "5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참가 서울 종로구는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을 이끌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임인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참가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는 오는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마포구,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공간을 구에 5~10년간 무상 임대해주면,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비와 교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협력 사업이다.

/김현정 기자